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광주 북구, 음식물쓰레기 처리난 ‘발등의 불’

(입력) 2016-03-04 12:59:44 (수정) 2016-03-04 14:02:12

(태그) [광주 북구](#), [담양군](#), [곡성군](#)

XMLNKR

담양군, 광주 북구·곡성군 등 호남 일부 지자체 쓰레기 처리업체에 1개월 간 영업정지 단행…근본적 해결책 마련 시급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이 관내 민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에 대해 전격 영업정지를 단행하면서 이 업체에 의뢰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온 인근 광주 북구를 비롯한 곡성·담양·구례군 등 전남·북 지자체의 음식물 처리난이 가중될 전망이다.

더욱이 담양군 주민들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이전이나 악취 저감 방안 마련 등 어느 것 하나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아 자칫 지자체 간 반목 및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담양군은 담양읍 태봉로 C음식물쓰레기 처리 업체에 대해 오는 5일부터 4월 4일까지 1개월 간 영업정지를 실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또 해당 업체에 음식물 폐기를 위탁하고 있는 인근 광주시 북구를 비롯해 곡성·구례군, 전북 순창군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해 음식물 쓰레기 반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청했다.

이와 관련 담양군 관계자는 “악취 민원 유발 업체에 강경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해 담양군민의 삶의 질 제고에 앞장서겠다”며 “악취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를 악취 특별관리시설로 지정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는 담양군이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이 극심한 음식물 쓰레기 악취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다 광주지법이 최근 악취를 유발한 C업체가 신청한 ‘영업정지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전격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 북구를 비롯해 C업체에 의뢰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온 광주, 전

남·북 지자체들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안을 긴급 모색해야 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특히 광주시 북구의 경우 지난 해 1주일 평균 147톤에 비해 C업체에 위탁하는 음식물 쓰레기량이 올 들어 월요일 20톤을 포함해 30톤으로 4.9배나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C업체의 영업이 정지될 경우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북구는 이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10대의 일요일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및 근무인원을 늘려 쓰레기를 최대한 수거한 뒤 광주시 송대동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서 처리토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나머지 6일간의 음식물 쓰레기 10톤을 처리할 방법이 여의치 않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북구는 다만 오는 6월말로 예정된 광주시 서구 유덕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이 완공돼야 담양군에 있는 C업체에 의뢰하지 않고 광주시 내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구는 그러나 6개월에 한번 씩 1~2주 일정으로 이뤄지는 정기검사로 광주 관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가동이 중단될 경우 담양군에 있는 C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 의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혀 특단의 대책마련이 없는 한 담양군과의 마찰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또 곡성군은 C업체의 영업정지시 인근 전북 남원시에 자리잡은 민간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 위탁처리키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이처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악취 발생 문제를 둘러싼 담양군과 광주 북구의 마찰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으나 양측의 입장차가 크고 이른바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민들의 고통 호소 및 반감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이전 및 신설 등은 엄두를 내지 못해 지역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광주시 북구 관계자는 “혐오시설을 극도로 꺼리는 이른바 님비현상이 심화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며 “C업체가 이미 허가된 시설인 만큼 담양군과 함께 악취저감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생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담양군 관계자는 “C업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악취로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직접 악취를 경험해보면 상생 운운할 수 없을 것이다”며 “광주 북구청을 찾아 강력 항의하겠다는 주민들을 설득하느라 행정기능

이 마비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C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를 단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ze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